

## 1.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통관기획과-730, 2019.2.13)

### 1. 행정 규칙명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8-56호, 18.12.11)

### 2. 개정 사유

- ☐ 규제완화 등 성실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신고정확도 제고를 위한 규정 명확화 및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 3. 주요 내용

- ☐ 수입업체 편의제고 및 추징불복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보세공장 잉여물품에 대한 즉시반출 제도 신설(제123조)

- (현황) 외국인 투자기업 시설재·원부자재 물품과 정부기관에서 신청한 물품에 대해서만 즉시반출 허용
    - (개선) 보세화물 제조·가공 중 발생한 잉여물품에 대해서도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제도를 허용으로 신속통관 지원

- \* 즉시반출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반출한 물품을 일괄하여 수입신고

-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신고 물량기준 명확화(제104조의2 신설)

- (현황) 일부세관에서 LNG의 하역과정 중 발생하는 리턴가스 물량을 과세하여 추징 후 심판청구 결과 패소 환급 조치
    - (개선) 리턴가스\* 물량은 수입신고물량에서 제외하고 공인감정기관의 검정보고서의 순반입량을 기준으로 신고

- \* LNG하역시 LNG선 탱크압력 저하방지를 위해 육상 선박간 공급되는 가스

- ☐ 수입통관 업무량 완화 및 성실업체 신속통관 확대

- 통관시스템 의한 전자통관심사(AI심사) 대상 확대(제63조)

- (현황)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공인받은 수입업체의 물품에 대해 전자통관심사 허용
    - (개선) AEO업체의 물품 외에 통관시스템에 의해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해서도 전자통관심사 확대 적용

- SOFA협정 적용물품에 대한 전자서명 증명서 제출 허용(제15조)

- (현황) SOFA 협정 적용대상물품 수입신고시 미군 통관장교 및 계약 장교가 서명한 원본 증명서 제출
    - (개선) 원본 증명서 외에 주한미군에서 전자서명하여 교부한 증명서도 제출 허용

- ☐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관세국경관리 강화

- 정밀검사 체계 구축에 따른 검사방법 추가 반영(제32조)

- (현황) 검사방법을 전량, 발체, 분석, 과학장비 검사로 구분
    - (개선) 일반검사(전량, 발체), 정밀검사(분석, 비파괴, 파괴), 안전성검사(협업, 방사능)로 검사방법 구분 운영

- 불법 유해물품 차단을 위한 통관심사 내실화 여건 조성(제33조)

- (현황) 서류처리는 당일처리가 원칙임에도 신속통관을 위해 3 근무시간 이내 처리를 별도 규정
    - (개선) 업무량 증가에 따른 형식적인 서류심사 방지를 위해 당일처리 원칙으로 환원

- ☐ 수입 신고정확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입항전신고 시점을 관세법령에 부합하도록 명확화(제3조)

- (현황) “입항전신고”는 입항시점을 항공화물은 하기신고시점, 해상화물은 하선신고시점을 기준
    - (개선) 적하목록 사전제출 제도 도입에 따른 입항전 하선신고 허용으로 하선신고 시점이 불명확해짐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 기준점을 최종 입항보고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

- \* 관세법 제243조제2항에 수입신고가 가능한 시점은 원칙적으로 ‘입항된 후’로 규정

- 통관보류에 따른 통관보류 통지서를 신고인에게 통보(제26조)
  - (현황) 통관보류시 통관보류여부만 전산으로 신고인에게 통보
  - (개선) 통관보류 사유 등 상세내역을 전자문서로 신고인에게 통보
- 개별소비세 누락 방지를 위한 신고란 분리 신고(1. 일반사항)
  - (현황) 개별소비세 물품 신고오류에 따른 사후 추징 빈번 발생
  - (개선) 동일 품목번호에 분류되는 물품이라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과 비대상 물품은 각각 란을 달리하여 신고
- 인터넷 구매대행 업체를 통하여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한 수입자 신고 명확화(4. 작성방법)
  - (현황) 해외직구시 개인 납세의무자와 수입자를 동일하게 신고
  - (개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에 의하여 수입하는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수입자로 신고
- 운송주선인 및 화학물질 등록번호(CAS NO) 신고시 기재(4. 작성방법)
  - (현황) 운송주선인과 성분신고시 선택 기재사항임
  - (개선) 운송주선인을 필수 기재토록 명확화하고, 화학물질인 경우 모델규격란에 화학물질 등록번호 기재토록 개선
  - \* 현재 선택사항인 모델·규격, 성분에 대해서는 품명, 세번별 신고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향후 고시 개정 후 필수기재 사항으로 운영 예정.

4. 신·구조문 대조표 : [www.custra.com](http://www.custra.com) 참조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 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 담당자 : 임동욱 사무관(☎ 042-481-7851)
- 제출기한 : 2019. 2. 28.
- 제출방법 : E-mail(adwlim@korea.kr), FAX(042-481-7819)

7. 시행일자 : 2019. 3. 中

※ 개정안 : [www.custra.com](http://www.custra.com) 참조

## 2.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6호, 2019.2.15)

### ◇ 개정 사유 ◇

-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지역 제한 폐지하고 용역공급업 등록시 선박 등록 의무를 기부여('18.6.1)
  -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는 선박(내항화물운송선박)을 식별하기 위해 선용품 적재신청시 선박 신고 필요
- 관세행정은 환경변화에 따라 대부분 간소화되었으나 선용품 분야는 전수관리\* 지속, 절차완화를 통한 민·관 효율성 증진
  - \* 전량 건별 허가제, 복잡한 업무절차(적재허가 → 이행착수보고 → 완료보고 → 확인등록)

### ◇ 주요 개정내용 ◇

- 선박연료공급 허가신청 시 연료공급선으로 기 등록된 선박의 선박명 및 선박번호 기재하여 신청(제7조)
  - (개정) 항만운송사업법상의 선박연료공급업 중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선박의 경우에는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여 전국영업이 가능(그외 선박은 지역제한)하므로 허가신청시 자격 선박을 식별, 오신청을 사전차단\*하여 민원 예방 및 행정 편의성 제고
- 선용품 흐름의 최대 병목인 이행착수보고를 원칙적 폐지하여 업체·세관 모두 업무부담 완화(제14조)
  - (배경) 선용품은 전량 건별 허가제 및 복잡한 업무절차로 업체·세관 모두 업무부하·지연 발생하나 관리 실효성은 미약
    - ※ 연간 52만건에 달하는 선용품 적재·하선건 모두에 대해 이행착수 보고 중이나 부정유출 등 적발실적은 0.3%에 불과(과다한 행정력 투입 및 민원 불편 초래)
  - (개정) ① 선용품 적재시 착수보고를 원칙적\*으로 폐지
    - \* 위험관리를 위해 선용품 하선, 환적, 그밖에세관장이 지정한 것에 한해서만 현행 유지
  - ② 세관검사(확인) 시간 확보를 위해 완료보고 시점을 현행 출항허가 전에서 선용품 적재 익일 오전 12시까지로 단축
  - \* 보고기한 이내에 해당선박 출항시에는 출항허가 전까지 보고

본문 : 생략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신청한 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제2항은 전산시스템 개선 이후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 전문, 신규대조표 : [www.custra.com](http://www.custra.com) 참조

### **3. 장외작업장 제조·가공물품 이젠 재반입 없이 바로 수출입신고 가능 관세청,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그동안 다른 종합보세사업장이나 보세공장 등(장외작업장)에서 보세작업을 하는 경우 제조·가공된 물품과 잉여 물품은 애초 종합보세사업장으로 재반입해야 했지만, 앞으로 종합보세사업장에 재반입하지 않고 장외작업장에서 바로 수출입신고 및 폐기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2월 15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먼저 장외작업장에서 통관절차를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종합보세구역 장외작업장 반출입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동안 동 고시 제24조(장외 보세작업)에 따라 운영인이 다른 종합보세사업장·보세공장 및 기타 해당 종합보세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작업을 하려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여기서 제조·가공한 물품과 잉여 물품은 애초 종합보세사업장으로 재반입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애초의 종합보세사업장으로 반입하기 곤란한 경우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수 있으며, 장외작업장에서 수출입신고, 양·수도 및 폐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애초의 종합보세사업장으로 재반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한편 「관세법」 제201조(운영인의 물품관리)에 신설된 매각절차 관련 내용도 고시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운영인은 종합보세사업장에 반입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외국물품이 ▲화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화주의 주소·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운영인이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하려는 경우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외국물품의 반출통고를 해야 하며, 반출통고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때 운영인은 ▲반입신고서, ▲반출통고서, ▲그 밖에 매각요청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명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세관장은 운영인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각 요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매각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 통보

(심사정책과-468, 2019.2.14)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이 불임과 같이 개정(공포일 2019.2.12.)되었기에 통보하오니 부칙에 유의하여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불임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534호) 1부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532호) 1부  
3.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9531호) 1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9534호, 2019.2.12.)

### ◇ 개정 이유 ◇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축소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을 인하하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산세가 면제되는 사유를 추가하고,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허용 사유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 내용 ◇

가.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납세담보 가액 평가방법 개선(제13조제4항제1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납세담보 가액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時價) 평가방법을 따르도록 개선해 세법 간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가액 평가방법을 일치시킴.

나.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축소(제22조)

종전에는 사업양수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함.

다.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인하(제27조의4)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시중 연체금리 수준 등을 감안해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1일 이자율을 1만분의 3에서 10만분의 25로 인하함.

라. 가산세 면제 사유 추가(제28조제1항 신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산세가면제되는 사유에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을 추가함.

마.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및 결격사유 신설(제53조제7항, 제53조제8항 신설, 제63조의16제5항, 제63조의16제6항 신설)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제한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위원회를 둔 세무서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등은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될 수 없음.

바. 조세심판관 자격요건 강화(제55조의2제1항)

조세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심판관은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등의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자격요건을 강화함.

사.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허용 사유 명확화(제63조의2제2호)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에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를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에만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함.

아. 세무조사 결과 통지 대상 확대(헌행 제63조의13제2항제1호 삭제)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불복청구권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세무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9조의3제6항 중 “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6조의2제5항”을 “법 제26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제16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세·가산금과”를 각각 “국세 및”으로 한다.

제22조 중 “승계한 자”를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제23조제1항 중 “국세·가산금과”를 각각 “국세 및”으로 한다.

제25조의2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27조의4의 제목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을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1만분의 3”을 “10만분의 25”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을 “(가산세의 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①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1조제1항 중 “국세·가산금 또는”을 “국세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세·가산금과”를 “국세 및”으로 한다.

제37조제4항제1호 중 “국세·가산금 또는”을 “국세 또는”으로 한다.

제43조의4제2항 중 “국세·가산금 또는”을 각각 “국세 또는”으로 한다.

제44조의2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2호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52조의2중 “제81조의15제5항”을 각각 “제81조의15제6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81조의15제1항”을 각각 “법 제81조의15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제5호 중 “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중전의 제11항) 중 “제9항의”를 “제10항의”로, “제10항에”를 “제1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중전의 제15항) 중 “제14항”을 “제15항”으로 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제한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국세심사위원회를 둔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3.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람

제5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관세사 또는 감정평가사”를 “관세사”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나.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다.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직

제55조의3제2호 중 “자격을 가진”을 “직에 5년 이상 재직한”으로 한다.

제62조의2제2항 중 “통보하여 그 심판청구사건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통보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심판청구서가 세무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 제출된 경우에는 제55조제2항에 따라”를 “심판청구서가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 제출된 경우에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③ 조세심판원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심판청구사건이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건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중요 사실관계의 누락, 명백한 법령해석의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주심조세심판관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세심판원장은 제3항 전단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주심조세심판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3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3호) 단서 중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을 “다만, 해당”으로 한다.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제63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63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3호) 중 “제81조의15제4항제2호”를 “제81조의15제5항제2호”로 한다.

제63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15제1항”을 “법 제81조의15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의15제2항제4호”를 “법 제81조의15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1조의15제4항제2호”를 “제81조의15제5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81조의15제1항”을 “법 제81조의15제2항”으로,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81조의15제2항”을 “법 제81조의15제3항”으로, “같은 조 제7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81조의15제1항”을 “법 제81조의15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을 “법 제81조의15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81조의15제1항”을 “법 제81조의15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부터”를 “제1항 및 제3항부터”로 한다.

제63조의16제4항 중 “외부위원”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위원”을 “민간위원”으로, “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제한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위원회를 둔 세무서,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3.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람

제63조의16제7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부위원”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중전의 제13항) 중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중전의 제14항) 중 “제13항”을 “제14항”으로 한다.

제65조의4제1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항 법 제84조의2제1항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동일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지급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0
250만원 초과	50만원

제66조제1항제2호가목 중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를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2년 이내”를 “2년 이내(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년 간”을 “3년 간(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년 이내”를 “3년 이내(제1항제2호가목의 기간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후단”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후단”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3조제1항, 제27조의4(조 제목 부분  
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항, 제37조제4항제1호 및 제4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담보 가액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의 감면을 신청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심판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0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절차가 끝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의3제3항제6호에 따른  
위원회 대하여 제9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8조(후발적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양도분에 대해서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에 납부기한이 지났거나 환급받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 또  
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하  
여 제53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이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53조제8항의 개정규  
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조세심판관 및 심판조사관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조세심판관 또는 심판조사  
관인 사람은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임기가 없는 사람은 해당 직을 수행하는 때까지를 말한다)는 제55  
조의2제1항 및 제55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2조(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해 제63조의16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이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63조의16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간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5. 주요국 관세·무역 동향 : 베트남

<자료 : KOTRA, aT,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

### ■ 기본 정보

- 국명 :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 수도 : 하노이(Hanoi)
- 인구 : 9,742만 9,061명(세계 15위\*) \* 2019년 기준(통계청·UN·대만통계청)
- 언어 : 베트남어
- 화폐단위 : 베트남 동(VND, 100VND=약 4.86원)

### ■ 시장 동향

- 한류 열풍의 진원지로서, 한국 드라마 및 영화의 인기로 한국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높음.
- 해외 브랜드 식품이 현지 식품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좋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함.
- 최근 박항서 축구감독의 인기에 힘입어 ‘박항서 효과’라고 불릴 정도의 수출 호조를 보임.

### ■ 관세·무역 동향

○ 對베트남 교역 규모는 62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 증가했으며,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제4위 교역 대상국임(2018년 11월 기준).

○ 지난해 베트남정부가 식품 안전에 관한 시행령(Decree No.15/2018/ND-CP)을 공포해 새로운 식품 검사 제도가 도입됐는데, 신규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으므로 수출 전에 반드시 현지 수입업체나 관세총국에 확인해야 함.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12개국) 중 2017년 1월 미국이 탈퇴한 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출범해 나머지 11개국의 공통세율 적용이 올 1월 14일부터 발효됨.

○ CPTPP에 따라 가입국에서 수입하는 우유 및 유제품의 수입세율은 7년간 점진적으로 0%까지 하락할 예정이며, 뉴질랜드·싱가포르·일본 등에서 수입하는 우유의 가격도 낮아질 전망이다.

### ■ 對한국 수입 규제 현황

(기준 : 2019.2.19.)

HS 코드	품목명	규제 내용	조사 개시일
7210.70, 7212.40	컬러도금강판(Certain flat-rolled products of painted coated alloy steel or non-alloy steel)	반덤핑 (조사 중)	2018. 10.15
7213.91/99, 7217.10, 7229.90, 9839.10/20	와이어와 형강제품(Wire and rolled steel products)	세이프가드 (조사 중)	2018. 7.26
3105.10.90, 3105.30.00, 3105.40.00, 3105.51.00, 3105.59.00, 3105.90.00	비료(Certain mineral or chemical fertilizers)	세이프가드 (규제 중)	2017. 5.12
7210.7010, 7210.7090, 7212.4010, 7212.4020, 7212.4090, 7225.9990, 7226.9919, 7226.9999	착색아연도금강판(Pre-painted Galvanized Steel Sheet and Strip)	세이프가드 (규제 중)	2016. 7.6.
7210.41/49/50/61/69/90, 7212.30/50/60, 7225.92.90, 7226	도금강판(Coated steel sheets)	반덤핑 (규제 중)	2016. 3.10.
7207.11/19/20, 7224.90, 7213.10, 7214.20,	반가공합금철강재(Semi-finished and certain finished products of alloy and	세이프가드 (규제 중)	2015. 12.25

7227.90, 9811.00	7228.30, non-alloy steel)		
2922.42	글루탐산소다(Monosodium glutamate	세이프가드 (규제 중)	2015. 9.1.

## ■ 베트남 관세율 알아보기

### ○ 베트남 관세청 온라인 조회서비스

- URL : <https://www.customs.gov.vn/SitePages/Tariff.aspx>

\* 베트남어와 영어로 제공되며, HS 코드 입력 시 세율, 시행령, 관세율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 호치민 투자진흥청(ITPC)

-URL :

[http://itpc.hochiminhcity.gov.vn/importers/how\\_to\\_import/tax/folder\\_listing/?set\\_language=en](http://itpc.hochiminhcity.gov.vn/importers/how_to_import/tax/folder_listing/?set_language=en)

\*품목분류 조회서비스는 영어로 제공되며, 류(Chapter)별로 클릭해 조회할 수 있음.

## 6. 관세청 질의 응답 사례

### 【품목분류】

#### 1. 락교의 품목분류

<질의>주로 초밥과 함께 먹는 락교는 어느 호에 분류하나요? 참고로 해당 물품은 캔에 담겨 있으며, ‘원료 → 세척 → 염장 → 발효 → 절단 → 껍질 벗김 → 선별 → 사이즈 선별 → 맛물 배합 → 탈기 → 내포장 → 살균 → 포장’ 등의 공정을 거칩니다. 성분은 락교(60%), 정제수(19.6%), 설탕(18.5%), 정제소금(1.5%),빙초산(0.35%),구연산(0.05%)입니다.

<답변>초산(빙초산 포함), 소금 등으로 조성된 액에 침적된 상태의 물품이며, 락교는 파속의 채소류로 신선하거나 냉장한 상태의 것은 제0703.90호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제23번 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3. 식초 또는 초산(acetic acid)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001호에 분류한다.  
1)채소 내부의 초산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상일 것  
2)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일 것

∴ 채소(락교) 내부의 초산 함유량이 0.5% 이상이고,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12% 미만일 경우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로 봐 제2001.90-9050호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채소 내부의 초산 함유량이 0.5% 미만이고,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12% 미만일 경우에는 제2005.99-9000호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채소 내부의 소금 함량이 12% 이상일 경우 동 규칙 제9번 항목(염수로 일시 보존처리한 채소)에 따라 제0711.90-5099호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 9. 염수(鹽水)로 일시 보존처리한 채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001호에 분류한다.

가.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인 것은 품목번호 제 0701호부터제0709호까지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채소 내부의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상인 것은 품목번호 제 0711호에 분류 한다

## 【개인물품 통관】

### 2. 중고 향수 해외 직구 시 면세 여부

<질의>일본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고 향수를 구매하려 합니다. 100ml 용량 (약 10ml씩 사용된 상태) 총 4개(가격 : 약 8000엔)인데,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건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향수의 경우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내이면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의 경우 목록통관 및 면세가 가능합니다.

∴ 향수의 자가사용 범위는 60ml이므로 구입하려는 향수가 90ml 정도씩 4병(총 360ml)이라면 면세통관이 되지 않으며,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을 기준으로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됩니다.

∴ 향수는 제3303.00-1000호에 분류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호에 분류된다면 관세 6.5%(C), 부가세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수입세금 계산방법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 × 관세율(6.5%)

-부가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10%

## 【수출·보세·환급·기타】

### 3. 피조개 종패의 환급 가능 여부

<질의>피조개 종패(種貝)를 수입해 어장에서 1~2년 양식한 후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관련 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①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 위 규정에 따라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돼야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동물의 사육 또는 식물의 재배 등에 의한 성장, 번식 등은 「관세환급특례법」상의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입한 피조개 종패를 양식한 후 수출하는 것은 관세환급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4. 휴대물품 반출신고

<질의>국내에서 명품 가방을 구매했는데, 해외여행을 갈 때 가져가려 합니다. 입국 시 세관에서 명품 가방으로 검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답변>문의한 내용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53조(휴대물품 반출신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휴대물품을 반출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은 출국지 세관장에게 신고해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입국 시 입국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해당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세관장은 여행자 등의 신분, 직업, 연령, 성별, 여행 목적, 체재기간 등을 고려해 반출 사유를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출국 시 출국장에서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시에도 세관장에게 자진신고를 해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제53조(휴대물품 반출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여행자는 세관에 휴대물품의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
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의 면세판매자가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
3. 법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여행자가 휴대반출하는 물품
4. 관계 법령에 따라 국외로 반출을 제한하는 물품
5. 해외 수출상당·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다만, 환급대상 물품, 귀금속류, 지급수단 및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은 제외한다)

∴ 휴대물품을 반출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은 출국지 세관장에게 신고해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입국 시 입국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해당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세관장은 여행자 등의 신분, 직업, 연령, 성별, 여행 목적, 체재기간 등을 고려해 반출 사유를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출국 시 출국장에서 신고를 해야 하며, 입국 시에도 세관장에게 자진신고를 해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 7. 조세심판 결정 레【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 <결정 요지>

청구법인은 과거 관세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등 원재료 가격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원재료의 가격은 생산지원비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고 이는 통상의 주의만으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3년 결산을 통해 원재료 가격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 정 번 호 : 조심2018관0207(2019.1.4.)

▷청 구 법 인 : 000

▷주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6.28.부터 2016.12. 21.까지 000 등 자회사(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 신고번호 000(2013.6.28.)호 외 237건으로 장갑(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국내 원·부자재(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의 가격을 누락하고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임가공비만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4.18.부터 2017.5.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쟁점원재료의 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생산지원비로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8.4.11. 청구법인에게 관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4.5. 처분청에 경정·고지된 관세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8.4.18. 이를 승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8.6.29. 및 2018. 8.31. 2차 및 3차 분할납부분에 대한 관세 합계 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7.12. 및 2018.9.10.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분할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8.7.26. 및 2018.10.12.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가)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서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이를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하되, 이러한 경우라도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장은 단순한 착오뿐만 아니라 경미한 과실 등으로 인해 탈세의도 없이 세금신고를 잘못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을 개정하였고,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을 개정하였다.

2018.3.29. 관세청장이 산하세관장에게 시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세금계산서지침’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2항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대하여 “수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주의의무의 태만·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서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조세심판원에서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개발비를 신고누락한 사건과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칩의 가격에 무상으로 공급된 OOO의 가격을 신고누락한 사건에서 관할세관장이 십수년간 해당 물품 수입신고 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납세자가 그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취소한 사례가 있다(조심 2015관153, 2016.1.29. 및 2013관183, 2014.3.5.).

(다) 청구법인은 1984년경부터 현재까지 OOO 소재 현지공장에 원재료를 공급한 후 이를 임가공하여 완제품을 수입하여 왔는데, 처분청은 1999년 혹은 2000년경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장갑의 과세가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OOO를 조사한 적이 있다.

당시 OOO는 쟁점판매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원재료의 가격은 장갑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였으나, 국내에서 구매한 쟁점원재료는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에 장갑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아 이를 누락한 채 임가공비만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이와 관련된 수출용 송품장(Invoice)·수입신고필증·자재소요량 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OOO의 소명내용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생산지원비가 누락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이를 이유로 추가적인 조사 및 과세처분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국가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수출에 힘써 달라는 취지로 격려의 말만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원재료 가격을 수입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당시킬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

(라)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은 수입통관과 관련된 업무를 직원 2명이 담당하고 있고, 그마저도 다른 업무와 겸임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원가내역을 자세히 파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원재료의 가격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나, 국내에서 구매한 쟁점원재료의 경우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에 중복해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쟁점원재료 수출시 임가공 수출이라는 점을 수출신고서에 명시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쟁점판매자가 임가공 수출신고를 하고 청구법인에게 임가공비만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해당 직원들은 쟁점판매자의 송품장을 참고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공급한 원재료로 생산된 장갑이 국내로 수입되는 비율은 전체 매출총이익의 약 2.6%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재정여건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을 위하여 관세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기도 곤란한 상황이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의 수출통관과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업무를 각각 다른 관세사에게 분리하여 위임하였기 때문에 수출입통관 업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관련 업무를 관세사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기 때문에 수출입통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전문가인 관세사들조차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원재료 가격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이를 인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 가격을 신고누락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 가격누락 사실을 인식한 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를 보완하려고 노력하였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가) 세금계산서지침 제12조 제1항에서 수입자가 가산요소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가산요소가 과세가격에 누락되었다는 인식이 없는 등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및 수입자가 가산요소 금액의 누락 가능성을 직·간접적으로 인식하고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을 세관장에게 입증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3.10.13. OOO이 2013년 및 2014년 결산을 거친 후에야 쟁점원재료의 가격을 누락한 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한 사실을 알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5년 수입한 OOO를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였고, 2015.12.21. OOO과 과세가격사전심사(ACVA, Advanced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및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가산요소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을 의뢰하는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기존 수출입통관 업무를 수임하였던 관세사들과 위임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OOO이 관련 자료를 직접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법인 2015년도 결산이 완료된 후 2016년 6월부터 약 3개월 간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2016년 10월경 자진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재정사정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2016년도 결산 후인 2017년 4월경 자진신고 및 ACVA 신청을 하려고 계획하던 와중에 처분청이 관세조사(2017. 4.18.~2017.5.12.)를 실시하였다.

(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 가격을 신고누락한 것을 인식한 후에는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여 왔고, 이는 청구법인에게 탈세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인바, 개정된 세금계산서지침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999년 혹은 2000년 당시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원재료 가격이 가산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후 생산지원비 누락에 대한 지적이나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정당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관세조사 통지서나 관세조사 결과 통지서 등 1999년 혹은 2000년 당시 실제 관세조사가 실시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조사의 주체 및 조사시점 등을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오로지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탄원서만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자체적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조사의 존재여부 및 그 내역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주장과 같은 관세조사 사실을 찾을 수 없었다. 한편, 처분청은 1996년 7월 직제개편으로 OOO로 개편되었으므로 1999년 당시에는 OOO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외 다수).

청구법인은 해외에서 구매한 원재료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 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나,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의 경우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에 수입신고 시 중복해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하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관세법」상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대해 부지 또는 오인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은 원재료 가격이 포함되지 아니한 수입신고가격에 대해 처분청이 십수년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관세조사가 이루어지기 수년 전부터 쟁점원재료 가격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여건상 수입통관 전문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웠으며, 관련 업무를 위임한 관세사조차 생산지원비 누락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나 세액납부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그 동안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십여 년간 과세처분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의 OOO 차장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년도 및 2014년도 결산을 통하여 이 건 관세조사가 이루어지기 수년 전에 이미 생산지원비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이 오류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즉시 이를 시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내부사정을 이유로 수정신고를 상당기간 차일피일 미루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신고의무의 이행을 해태한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

(마) 청구법인이 가산세 면제의 근거로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는 단순히 관할세관장이 십여 년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임가공위탁자가 개발비 및 OOO 비용을 납세의무자(임가공수탁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모기업으로 쟁점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재고관리, 대금 송금 및 임가공비 송금 등 생산 전반을 통제하는 상황이므로 쟁점물품 수입 시 생산지원비의 존재여부 및 그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었고, 관세조사 당시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ERP 시스템을 통하여 품목별 생산원가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선결정례를 쟁점물품에 원용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생산지원비 누락 사실을 인식한 후 이를 보완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의무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성실한 납세신고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과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16. 7.28. 결정 2014헌바 37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개정된 세금계산서지침 제12조를 들어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 쟁점원재료 가격을 생산지원비로 정확하게 신고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판매자에게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등을 무료로 공급한 경우 그 재료 등의 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쟁점원재료 가격의 생산지원비 해당 여부에 대한 법해석의 복잡성·난해성이 없다.

오히려 세금계산서지침 제12조 제2항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지 않고 통상적인 주의의무만으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납세신고를 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로 ‘생산지원비’를 예시하고 있다.

더구나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모기업으로 쟁점물품 수입 시 생산지원비의 존재여부 및 그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 가격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지한 이후 청구법인 내부사정으로 인해 수정신고를 진행하지는 못하였으나 2015년 수입물품에 대하여 임가공비에 OOO를 추가하여 신고하는 등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이 원재료 가격의 누락을 인식한 후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성실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방증할 뿐이다.

###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1970년에 설립된 모회사로부터 독립하여 1997.8.13. 설립되었고,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에 소재한 쟁점판매자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판매자의 원재료 구매·현지 원재료 재고관리·원재료 대금송금·생산설비 취득 등을 총괄관리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5.18.자 OOO의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이 1999년 또는 2000년경 처분청 OOO부터 관세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쟁점판매자에게 무상의



로 공급한 원재료 가격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과세하거나 추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에 힘써 달라고만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1999년 또는 2000년 당시 처분청의 관세조사 통지 공문·관세조사 통지서·자료제출 요구서 및 관세조사 결과통지서 등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관세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1996.7.10. 대통령령 제15116호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전국 세관의 심리관실(또는 심리과)이 조사과로 개편되어 청구법인이 조사를 받았다는 1999년 또는 2000년에는 처분청에서 심리과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심사/조사이력조회 화면에서 이 건 관세조사(2018.2.14. 기획심사가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외에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관세조사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 000의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이 2013년도 및 2014년도 결산을 통하여 쟁점원재료 가격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지한 후 2015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000를 추가하여 신고하였고,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신청 등을 위해 지평 관세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5.12.21. 000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1.12. 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2013년도 결산이 완료된 2014년 이후부터 이 건 관세조사 시까지 쟁점원재료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시도하였거나 관세청장에게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의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관세청장이 2018.3.29. 산하세관장에게 시달한 세금계산서지침 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정확한 납세신고를 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예시로 수입자가 외국 수출자에게 의류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직접 구입해 제공한 원단 등의 가격(생산지원비)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생산지원비 과세여부는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원재료 가격을 신고누락한 데에 귀책이 없고, 처분청이 1999년 또는 2000년경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생산지원비 신고누락에 대하여 지적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처분청 심리조사실 또는 심리과조사실에서 관세조사를 받았다는 1999년 또는 2000년에는 관세청 직제가 변경되어 심리과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조사과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통지서 등 당시 관세조사를 받았다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상 당시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와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의 재고관리 등을 하고 있어 쟁점원재료 가격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령에서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원재료의 가격은 생산지원비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8.3.29.자 관세청장의 세금계산서지침에서도 수입자가 외국 수출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원재료를 제공하였음에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이를 누락한 경우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도 과세가격 누락

사실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3년도 결산을 통하여 쟁점원재료 가격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종전에 저가 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건 관세조사 시까지 저가 신고를 지속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8. 원산지증명서 출력 관련 편의기능 및 유의사항 안내

최 준 | 제주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

### I. 개요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발급방식에 따라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형태로 나뉜다. 기관발급은 각 국가별로 정해져 있는 기관을 통해서 발급받는 방식이며, 자율발급은 말 그대로 각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발급·관리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청(유니패스), 대한상공회의소(무역인증서비스센터)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서류를 신청해 심사·승인된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각 기업에서 출력해 사용하는 형식이다.

관세혜택 여부에 따라서도 특혜(FTA 포함) 및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나뉠 수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포함해 주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발급방식과 특혜 여부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유형】

발급 방식	FTA	특혜 일반특혜	비특혜 일반	발급기관	비고
기관 발급	○ ASEAN ○ 인도 ○ 중국 ○ 베트남	○ GSP ○ GSTP ○ APTA ○ TNDC	○ 일반	관세청, 상공회의소	※ 비특혜(일반)는 상공회의 소에서 발급
자율 발급	칠레, EFTA, EU, 페루, 미국, 터 키, 호주, 캐나 다, 뉴질랜드, 콜 롬비아	-	-	각 기업	-

이 외에도 특정국 원산지증명서, 남북 교역물품 원산지증명서 등도 기관발급을 통해 발급받도록 돼 있으나 활용도 면에서 그다지 빈도가 높지 않다.

이번 호에서는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출력 관련 기능을 소개하고자 한다(무역인증서비스센터 기준). 이 기능은 업체의 편의를 위해 마련돼 있으나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서 출력(인쇄) 시에 업체가 흔히 범하는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한다.

### II. 원산지증명서 출력업체 지정기능 안내

원산지증명서 출력업체 지정기능은 다양한 사유로 인해 원산지증명서 신청기업과 출력기업을 다르게 설정하려는 경우 신청기업이 특정 기업에게 출력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이다. 특히 바이어의 긴급한 요청이나 생산업체와 수출업체가 일치하지 않고, 물품선적지와 서류발급지가 원거리일 경우 등에 서류의 신속한 흐름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 활용 과정은 다음 순서와 같다.

첫째, 원산지증명서를 출력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출력사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무역인증서비스센터 홈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사용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출력사용자 등록을 진행한다(아래 그림 참고).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출력기업의 공인인증서(사업자번호 또는 전자무역용)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출력사용자로 등록하려는 업체는 상공회의소에 별도로 서명 등록돼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

## 【출력사용자 등록 바로가기】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용자 구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르니 본인에 해당하는 경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인증시스템 사용자 등록**

서명등록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한 이후 증명서의 신청, 조회 및 출력을 위한 협인증시스템

[바로가기](#)



**출력 사용자 등록**

서명등록, 증명서의 신청 없이 타 업체가 신청한 증명서를 조회, 출력(공인인증서 발급 필수)

[바로가기](#)



**EDI 출력 사용자 등록**

EDI 증명신청 사용업체로 신청한 증명서를 조회, 출력 (공인인증서 발급 필수)

[바로가기](#)

!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사용자 여러분이 무역인증서비스센터를 이용함에 있어 온라인상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원산지증명서 신청업체에서 출력업체를 지정해 출력권한을 부여한다. 증명서 신청업체가 무역인증서비스센터 시스템에 로그인해 마이페이지 - 정보관리 - 출력업체 지정 순으로 진입해 출력업체 지정을 진행한다. 신청문서 유형별(FTA, 일반 등)로 분류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 【출력업체 지정 등록】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무역인증안내 원산지증명서 기타무역인증 ATA특전제 마이페이지 고객지원 문의 및 견본

HOME > 마이페이지 > 정보관리 > 출력업체 지정

**마이페이지**      **출력업체 지정**

증명서 발급 현황

자료제 발급 현황

결제관리

**정보관리**

회원정보 수정

**출력업체 지정**

서명등록 인증인고

통관 세관계산서 신청

Exporter 관리

Importer 관리

Producer 관리

물류 관리

발급통지 조회

보서로그 관리

FTI발급대장

출력업체 등록

출력업체 유형:

사업자등록번호:

현재 등록된 기업명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출력사명	제자상태
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		

셋째, 출력업체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출력한다. 앞에서 설명한 ‘출력사용자등록 - 출력업체 지정’ 절차를 거치면 출력업체로 지정받은 기업이 출력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해 원산지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다.

## 【원산지증명서 출력업체 지정절차 개념도】

### III.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출력기능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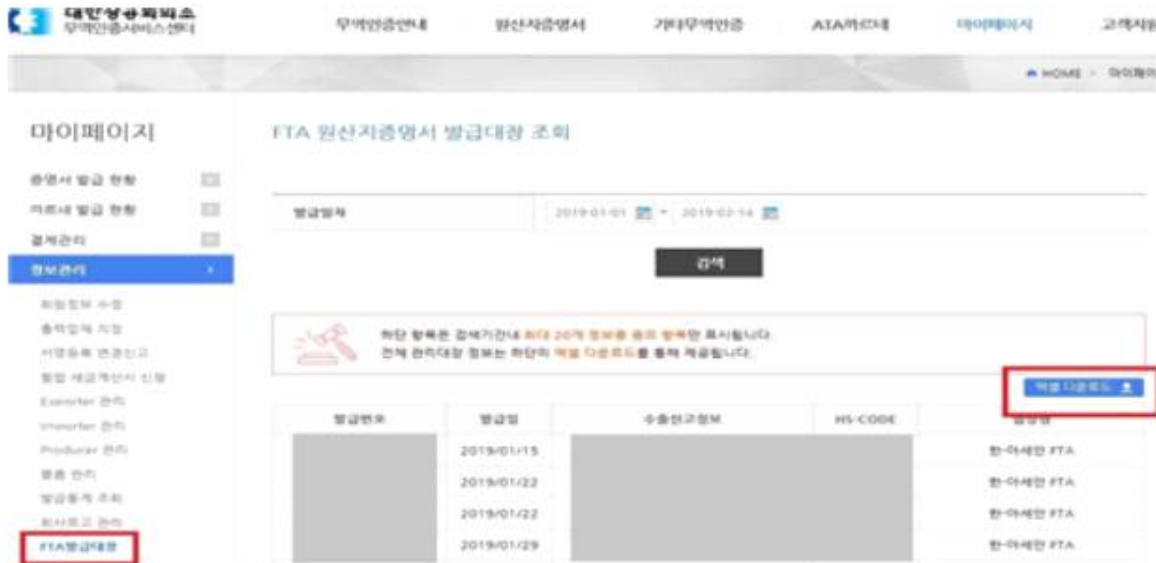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출력기능은 수출 시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내역을 수기로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발급 건 기재 누락 등의 업무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또 하나의 업체 편의기능이다.

단, 해당 기능은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 건에 한해서만 자동정리되므로 이를 유념해



야 한다.

###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 엑셀 다운로드 】



위 그림과 같이 마이페이지 - 정보관리 - FTA발급대장 순으로 진입해 발급일자를 설정하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간 동안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을 엑셀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 IV. FTA 원산지증명서 출력(인쇄) 시 유의사항 안내

다음은 업체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출력(인쇄)하면서 겪는 대표적인 실무 유의사항을 요약했다. 유의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통관장애나 관세특혜 배제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출력(인쇄) 관련 다음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자.

첫째, FTA 원산지증명서는 'Overleaf note' 인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한·ASEAN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APTA 원산지증명서 인쇄 시에는 뒷면에 'overleaf note'를 반드시 인쇄해야 하는데 발급시스템상의 'OVERLEAF' 버튼을 눌러 인쇄가 가능하다.

앞면은 원본, 뒷면은 'Overleaf note'로 책자형으로 양면 인쇄하되 자동으로 양면 인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 면 인쇄 후에 그 용지의 방향을 잘 맞춰 급지함에 다시 넣고 다른 한쪽 면까지 인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반드시 각기 소유하고 있는 프린터의 인쇄 방향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Overleaf note'는 여러 장 출력이 가능하지만, 원본은 1회만 출력할 수 있으므로 'Overleaf note'를 여러 장을 먼저 출력해 충분한 연습 후에 원본을 출력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둘째, 일반 A4 규격 용지를 사용하되 너무 얇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앞서 말했듯이 한쪽 면이 출력된 용지를 다시 급지함에 넣고 반대 면을 출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불량 용지를 사용하면 출력과정에서 프린터 내부에 걸리거나 인쇄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원본은 재출력이 불가하므로 해당 상황 발생 시에 업체 입장에서 많은 부분이 번거로워질 수밖에 없다.

셋째,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인쇄해야 한다. 간혹 소유한 프린터가 흑백전용인지 모르고 인쇄하거나 잉크, 토너의 일부 색상 부족으로 인해 실제 색상과 상이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출력·제출해 통관 애로를 겪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출력 전 꼭 프린터 사양이나 잉크·토너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 V. 결론

앞서 소개했던 원산지증명서 출력 관련 편의기능에 대해서는 의외로 정기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해오던 기업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업무 특성상 촌각을 다투는 일이 잦은 수출 실무현장에서 매우 요긴한 기능임에도 해당 기능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해 공인인증서와 패스워드, 계정 자체를 건네주는 위험한 방식으로 문서를 출력하고 있거나 정보유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매번 시일 지연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접 출력해 송달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적지 않다. 따라서 기업 상황에 맞게 해당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수출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보다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서 출력(인쇄) 전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업무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뜻하지 않은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호를 통해 간편하면서도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해당 기능이 널리 알려져 각 수출기업 실무 일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